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제1차 충남현장포럼’ 개최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 지역별 자율적 역량 강화 필요”



충남연구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의 해답을 찾는 ‘충남현장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한다.

지난 3월 18일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주)’(금산군 부리면 소재)에서 충남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제1회 충남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과 사업 등을 점검함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유학열 연구위원은 “충남은 지난 2011년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개소 이후 △로컬푸드 인증 ‘미더유’ 사업 △전통주 아카데미 △6차산업화 코칭·컨설팅 및 홍보 △안테나숍 개장 △국내외 심포지엄 개최 등 도내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 정책 중심의 하향식 사업 편중,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유연성 결여,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 해결

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의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농촌산업과장, 충청남도 김형국 농촌산업팀장, 금산흑삼(주) 고태훈 대표, 사비팜 염광연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 농촌산업활성화현장포럼 김웅령 회장, 그리고 권오성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등이 참석해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인 ‘6차산

업 활성화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좌장인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이제 6차산업은 지속 가능성, 공익적 가치를 염두에 둔 성공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들도 정책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6차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국제세미나〉 개최

“도농상생의 길, 생산자-소비자 간 다양한 연대 필요”



지난 24일 충남연구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도농상생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도농상생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세미나’는 지역 중심의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원소식

한·중·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책적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지역의 농업과 로컬푸드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한·중·일 CSA 대표자로 초청된 일본 미에대학 하타노 다케시(Hatano Takeshi) 교수, 중국 국제CSA연맹 부의장인 스옌(Shi Yan) 박사,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가 각국의 CSA 현황과 과제 등을 소개했다.

또 종합토론은 충남도 3농혁신위원장인 단국대

학교 김호 교수의 좌장으로 충남도 추옥 농산물유통과장, 세종시 권영석 로컬푸드과장, 지역재단 허남혁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김기홍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역공동체지원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언니네 텃밭 강다복 이사장, 청양나눔영농조합 박영숙 이사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천섭 센터장, 정농회 금창영 이사 등이 CSA와 관련된 현장의 축적된 경험과 개선방안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충남연구원,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개최

“충남 사회적경제, 중국과 교류협력 확대해 나가기로”

지난 4월 20일 충남연구원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해교통대학과 함께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날 양국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그 동안 사회적기업(경제)의 선진사례는 주로 스페인, 영국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치우쳐 있었고 가까운 중국, 일본 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양국 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행사라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사회적경제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상해교통대학 제3부문연구중심 소장인 쉰자량(徐家良) 교수의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번 세미나가 충남 사회적기업의 성공경험을 배우고 중국에 도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하이와 충남 양 지방의 구체적인 교류협력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충남과 상해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연구와 관련 서적의 번역·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장시켜 ‘관씨(關係)를 구축함으로써, 충남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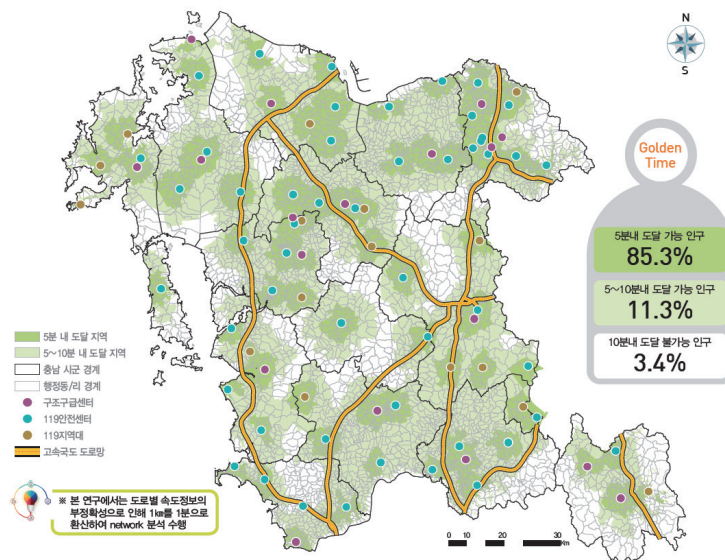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제5호 발간

“충남지역 구급센터, 골든타임 10분내 도달 인구 96.6%”

“농촌지역 구급사고 185,001건, 도시지역보다 2배 높아”



〈시군별 구급사고 종류별 분포 비율〉



〈구급센터로부터 골든타임 분석〉

충남도내에서 지난 3년간(2012~2014년) 발생한 구급사고 발생의 공간 특성과 구급센터로부터의 출동 골든타임을 분석한 지도가 나왔다.

이는 충청남도 소방방재센터가 제공한 구급사고 279,409건과 각종 공간자료를 행정동·리 단위로 연계 분석한 결과다.

충남연구원 미래정책연구단 최돈정 박사는 ‘충남정책지도 제5호’에서 “충남의 골든타임 분석 결과, 충남지역 구급센터로부터 5분내 도달할 수 있는 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85.3%, 10분 내 도달 가능한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96.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행정동·리 개소 수와 사고발생 지점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4,417개소의 행정동·리 중 5분내 도달가능한 곳은 3,777개소(85.5%), 전체 사고지점 279,409개소 중 260,719(93.3%)개소가 구급센터에서 10분내 도달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구급사고 발생특성에 대한 공간분석결과, 지난 3년간 구급사고발생 50건, 인구대비 사고발생률 50%를 모두 초과하는 일명 ‘사고다발지역’은 전체 행정동·리 4,417개소 중 387곳으로 나타났고, 이 중 386곳이 행정리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연구원은 “특히 농촌지역으로 분리되는

행정리는 지난 3년간 185,001건의 구급사고가 발생하여 94,408건이 발생한 행정동의 약2배가 많았다”며 “또한 인구 백명당 구급사고 발생건수도 행정리 평균이 29.6%로 행정동 평균 5.9%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체 구급사고 279,409건에 대한 시군별 비율은 천안시(59,208건, 21.2%), 아산시(34,332건, 12.3%), 서산시(22,311건, 8.0%), 당진시(21,744건,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급사고의 종류별 분포는 기타사고를 제외하면 질병사고(39.6%), 사고부상(20.8%), 교통사고(11.9%) 등의 순이며, 이는 모든 시·군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최 연구원은 “시군별 구급사고의 종류별 비율을 보면, 당진시가 교통사고 비율이 17.2%로 가장 높았고, 청양군은 질병사고 비율 44.1%, 사고부상 비율 25.7%로 각각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사고 279,409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사고는 총 84,472건으로 전체 구급사고의 30.2%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 구급사고 대비 고령 인구 사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은 충남 전체 행정동·리 4,417개소 중 1,406개소(31.8%)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별 비율로 보면 청양군(52.5%), 서천군(46.2%), 예산군(41.4%) 등의 순이다.

